## 정후식 칼럼

# 5·18 진상 규명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논설실장·이사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는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와 세계가 공인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해마다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고 있고 2011년에는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그럼에도 '오월 광주'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날의 진실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 인권 유린 등 핵심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활동이 몇 차례 있긴 했다. 1988년 국회의 광주특위와 청문회, 1995년 검찰의 12·12 및 5·18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가 그것이다. 오월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가 그 동력이 됐다. 덕분에 신군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과 국가 폭력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유공자 명예 회복과 보상도 진행됐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밝혀진 진상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역사 바로 세우기'는 반쪽에 그쳤다.

오월의 진실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은 당시 신군부 정권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관련자들의 비협조, 정치적 타협 등으로 조사 때마다 한계에 부딪힌 탓이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보고서조차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 부실한 토대 위에 보수 정권과 정당들은 5·18을 끊임없이 왜곡·폄훼하며 흔들어대고 있다.

오월 진상 규명의 새로운 단초가 된 것은 지난 2016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150여 발의 탄흔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헬기에서 무차별 발사된 총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광주 시민들의 잇단 증언에도 '헬기 사격은 없었고 도청 앞 사격은 상부 명령 없이 현장에서 이뤄진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해 온 신군부와 군 당국의 억지 논리가 정부 기관에 의해 뒤집어졌다.

2017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조사위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구체적인 발사 경위와 최종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 마침내 '진실의 문' 열리나

이에 따라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국회에서는 김동철·이개호·최경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했다. 논란 끝에 지난해 2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핵심은 5·18 강제 진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5·18과 관련 피해자·희생자 보상, 유공자 예우, 전두환·노태우 처벌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된 바 있으나 진상 규명만을 위한 법안은 처음이었다. 38년 만에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조사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도록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한 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네 명을 추천해 모두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 조사 위원의 추천과 임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민병로 전남대 교수 및 이성춘 송원대 교수와 서애련 변호사를,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극우 논객 지만원 씨 등을 거론하다 지난 1월에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세 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5·18을 폄훼한 전력이 드러나 오월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후 한국당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추천을 또다시 미뤘다. 급기야 여야는 지난 4월 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다가 지난 17일에야 겨우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연내 법안 처리와 진상조사위 출범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5·18 40주년 기념일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지금은 오월 진상 규명의 골든타임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수반인 문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18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약속하는 등 수차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더 이상 분노와 슬픔 없도록

언론 보도와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도 숨겨졌던 진실들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5·18묘지를 참배하고 오월 영령에게 사죄한 것도 가해자 측의 참회와 고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토대로 국가 공인 보고서를 채택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5·18을 만드는 일은 이제 국회와 정치권의 노력에 달려 있다.

설사 연내 조사위가 출범한다 해도 초기 6개월은 조사 설계와 준비로 훌쩍 지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내년 4·15 총선이 끼어 있고 여기서 여야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현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고 대선이 성큼 다가오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바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한국당도 광주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오월이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이 아닌 국민 통합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 社說

# 특급호텔 없어 대형 행사 타지에 뺏겨서야

광주 개최가 유력시되었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정부 사전 실사 과정에서 특급 호텔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관광 및 국제회의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인프라 확충 실패로 대형 국제행사를 다른 지역에 넘겨주는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올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말 정부 관계자들이 사전 실사를 벌였다.

하지만 국외 정상들이 머무를 만한 특급 호텔이 없고 그에 따른 경호·숙박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 개최지는 아세안문화원이 있는 부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정상들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부대 행사를 포함해 양측 국민과 기업인 1만여 명이 참여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회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큰 국제행사를 숙소 등의 문제로 놓친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광주의 숙박 시설이 열악해 이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번번이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는 현재 5성급 호텔은 하나도 없고 4성급 두 곳, 3성급과 2성급 각 세 곳, 1성급 네 곳이 전부다. 그나마 4성급 두 곳의 객실도 325실에 불과해 국내외 정상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는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다.

광주시는 현재 제2컨벤션센터와 어등산 관광단지 내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지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광주가 2007년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됐지만 인프라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국제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4·5성급 호텔 추가 유치와 면세점·유통시설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심각한 '교권 침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즘 교사들로부터 '선생질하기 참 힘들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한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욕설과 폭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당하는 교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는 1162건이나 됐다. 연간 평균 232.4건이니 거의 하루에 1건 꼴이다.

전국적으로 5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1만 5103건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만 4506건, 학부모나 동료 교원 등에 의한 침해는 597건이었다. 폭언·욕설이 8834건(58.5%)으로 주를 이뤘고, 수업 방해 2670건(17.7%), 성희롱 604건(4.0%), 상해·폭행 539건(3.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 행위가 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2014년 86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치솟았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례도 같은 기간 80건에서 164건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치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자도 2017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광주 1181건, 전남이 162건이나 됐다. 학부모들이 교실까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도 있고 보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며 교사들이 한숨을 내쉬는 건 당연해 보인다.

최근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느는 것 또한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여 주는 사례다. 교원 사기 저하는 고스란히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은펜칼럼

# '선한 사마리아인 법'

박 행 순
전남대 명예교수

2000년을 전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을 미국, 캐나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법을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2008년에 제정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유래한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다음과 같은 비유로 대답하신다. 어떤 유대인이 산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그를 본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랬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다.

이 비유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대하는 두 부류, 즉 구조자와 방관자가 나온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구조자를 보호하는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과 방관자를 처벌하는 '구조 불이행죄'를 말한다.

유튜브에는 물에 빠진 여성을 건져주고 곤욕을 치른 남성들의 사연이 여러 건 있다. 구조 과정에 여성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며 구조 받은 여성들이 감사는커녕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구조자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제5조 2항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 의료 또는 응급 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되어있다.

2016년 10월 대전에서 한 택시기사가 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심장 마비를 일으켰다. 이때 승객들은 112 신고도 않고 골프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떴다. 얼마 후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그 승객들은 구조 불이행죄로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만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방관자들을 비난만 할 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방관자를 처벌하는 구조 불이행죄 법안을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의원이 2016년 발의했으나 입법화에 실패했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고 법적용 한계가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프랑스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비교하면 우리 법은 반쪽이다. 구조 불이행죄가 없으니 심장 마비의 택시 기사는 황금시간대를 놓쳐 목숨을 잃고, 물에 빠진 여성은 방관자들 앞에서 익사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 싫어하고 점점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간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시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그가 혹시 죽는 경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즉, 구조자가 되라고 명령하신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은 법이나 직무 이전에 사랑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

## 無等鼓

# 청려장(靑藜杖)

평균수명이 35세 안팎이던 조선시대에는 장수를 기념하는 축하연을 성대하게 치렀다. 70세가 넘은 정 2품 이상 고위 관료 출신들을 위해 국립 경로당에 해당하는 '기로소'(耆老所)를 운영했고 매년 삼짇날(음력 3월3일)과 중양절(음력 9월9일)에는 기로연이란 잔치를 벌였다. 기로연에서 임금은 고령의 원로들에게 술과 전답·염전·노비 등을 하사했다. 70세가 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임금이 더 붙잡아 두고 싶은 신하에겐 국정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의자와 지팡이를 내렸다.

고령자에 대한 예우는 평민이나 심지어 노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양로연 제도를 만들어 노비라도 80살이 넘으면 정부에서 잔치를 열어 주었다. 양로연은 세종대왕 이후 국상이나 흉년을 제외하곤 웬만해서는 중단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신경을 쓴 국가 중대사였다. 100살 이상이면 1년치 쌀과 함께 매달 술과 고기를, 90살을 넘으면 매년 술·고기·술잔을 주었다. 80살에는 지방관이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다.

장수를 기념하는 선물로는 청려장(靑藜杖)이란 지팡이가 많이 쓰였다. 명아주라는 한해살이 식물로 만든 지팡이인데 본초강목에 따르면 청려장을 짚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 50세가 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장(家杖)이란 이름으로 청려장을 선물했고, 60세가 되면 마을에서 향장(鄕杖)을, 70세 때는 나라에서 국장(國杖)을, 80세가 되었을 때는 임금이 조장(朝杖)이란 이름으로 청려장을 하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1992년부터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대통령이 청려장을 수여하고 있다. 광주에서 만든 청려장이 12년째 정부에 납품되고 있다고 한다. 남구 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남구 대촌동에서 재배한 명아주로 1년에 2000여 개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도 1550개를 전국 17개 시·도에 보냈는데, 노인의 날 100세 노인들을 비롯해 장수 어르신들의 손에 쥐어질 예정이다. '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청려장을 받는다는 건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가문의 영광일 것이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 기 고

# 협동조합 택시의 미래

이 상 식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2016년 12월 29일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택시 46대의 호남 최초 기업형 협동조합이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가까워집니다. 열악한 택시 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이 우리 사주가 되어 민주적 운영, 투명한 회계 처리, 공정한 분배로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이 아닌,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는 쿱 택시(Coop Taxi)의 탄생은 빛고을 광주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택시업계에선 전국 유일하게 장년 인턴제 및 광주 노인 일자리자금을 지원받아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택시를 처음 운행하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 스스로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사랑의 헌혈'과 '생명 존중 장기기증'을 매년 시행하여 협동조합의 뜨거운 피가 지역 사회를 녹이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 했습니다. 매월 카리타스 보호작업장 및 근로복지시설에 조합원들이 기부금을 전달하고 노력 봉사를 하며 미래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고자 했습니다.

출자금을 낸 우리 사주 조합원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 택시에 비해 처우와 수입, 근무 환경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조합은 존스턴 버첼의 저서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생애주기로 보면 초기 설립기에 해당합니다. 초기 설립기에는 '집단행동의 극복'이 과제가 되곤 합니다. 잘못되면 조직이 갈라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라는 책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전쟁을 벌이는 것, 다른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서 더 성장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특히 근거 없는 의혹으로 선동하거나 내부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경우에 조합원 모두가 나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 기술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조합원은 사고 없는 안전 운행을 함으로써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힘든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게 운행하는 우리가 협동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함께 나누는 삶의 공동 터전을 우리 손으로 웃으며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쉬이 내달리는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쯤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두의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인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광주시민들에게 '노란색 쿱 택시는 다르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의 존엄을 지켜갈 때 진정한 협동조합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3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